

▷ 환경부 '분리배출표시제도' 신설...재활용여부 쉽게 구분

소비자들이 폐기물의 재활용 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분리배출표시제도'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기존의 제품 및 포장재 등에 적용하고 있는 재질분류표시제와 재활용가능표시제를 분리배출표시제로 통합하기 위해 제2종 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및 재활용가능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지난 9월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돼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체계가 구축돼 있는 용기 및 포장재에만 분리배출표시 마크가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금속캔 및 합성수지용기 등 제품의 재질을 나타내는 재질분류 표시를 소비자들이 재활용가능 표시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분리배출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재활용 가능 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와 함께 정부 재활용 정책의 불신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환경부 '에너지절약' 단체·개인에 포상키로

최근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에너지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유류와 전기, 물 등 3대 에너지 절약실천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환경부는 본부와 산하기관, 산하단체의 전직원과 가족 등 환경가족 6700여명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매월 에너지절약 실천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금과 함께 장관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본부와 산하기관, 산하단체의 전직원과 가족 등 환경가족 6700여명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매월 에너지절약 실천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금과 함께 장관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가족이 다음달부터 전기 또는 수도요금 영수증 등을 활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절약한 에너지 양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경우 개인에게는 10만원 내외의 농수산물 구입권 등이, 기관과 단체에게는 장관 표창을 줄 예정이다.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 선정을 기대하는 환경가족은 에너지 절약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환경부 총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가 이처럼 인센티브까지 도입하게 된 것은 에너지 절약이 환경 보전과 직결되는 데다 환경가족이, 솔선수범, 전국민의 생활실천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환경부는 포상금 지급제도 이외에 3대

에너지 절약생활 수칙을 담은 홍보 팸플릿을 배부하는 한편 각 부서 및 가정별로 가칭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해 점심시간 소등, 쓰지 않는 전기제품 코드 뽑기 실천 여부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급등에 이어 겨울철 난방수요까지 겹치면서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구호보다는 실천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 [환경]토양오염 자정화 의무화

내년부터 토양을 오염시킨 오염원인자는 피해배상과 함께 정화책임의 의무를 지며 토양오염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9월19일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토양 환경보전법을 개정해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토양오염 관리대상을 확대해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물질은 지정토양오염물질로 지정·관리하며, 현재 매년 동일 지점의 토양오염도를 측정하는 지역 측정망 체계를 개선해 매년 오염우려지역을 선정해 오염조사를 실시하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설치된 터를 사고 팔 때 토양오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양도자나 양수자가 터의 토양오염을 사전조사·진단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신고 및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자에 대



한 명령 등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도록 하고, 토양 관련 전문 기관에 의한 토양오염검사 및 토양정밀조사 때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및 지정취소 등 처벌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 환경부, 환경단속 실명제 전면 실시

환경부는 지난 10월부터 환경분야 부조리 방지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시 사업장을 방문하는 공무원이나 환경부 산하 단체 직원의 인적사항과 점검내역을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장 방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환경부가 지난 1월부터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단속 실명제를 실시한 결과, 사업자들로부터 환경단속의 투명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에 따른 것이다.

환경단속 실명제는 배출업소 단속시 점검표에 점검자의 인적사항과 점검 내역을 기재하고 그 사본을 사업자에게 전달하며 점검자 개인별로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해 1년간 보관토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장 방문 실명제는 이 같은 단속업무 외에 ▶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지도감독·행정감독 ▶환경기 술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체 지도·방문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환경관리 일반 현황 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협의 내용 관리·감독 등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대검, 부정식품·환경사범 적발시 관련 설비 몰수

앞으로 가짜 참기름 등 부정식품을 만들

환경부는 지난 10월부터 환경분야 부조리 방지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시 사업장을 방문하는 공무원이나 환경부 산하 단체 직원의 인적사항과 점검내역을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장 방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거나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관련 설비가 몰수 조치된다.

또 이들 반공익사범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철저히 적용되고 사업장 폐쇄와 같은 행정조치까지 뒤따른다.

대검(www.sppo.go.kr) 형사부(제갈용우 검사장)는 지난 10월3일 부정식품·환경 사범 등 반공익사범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단속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에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관련 법률에 규정된 몰수 조항을 활용해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 설비를 원칙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 만큼을 추징토록 했다.

▷ 환경보호지역 건축허가 사전승인 의무화

내년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

지사가 자연환경 및 수질보호를 위해 지정·공고한 지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21층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2일 기초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 남용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법을 이같이 개정,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일조권 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

일조권 피해도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0월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범위와 조정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환경피해의 범위를 대기, 수질, 소음·진동, 자연환경 피해 뿐만 아니라 일조권 피해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아울러 사람이 사망하거나 피해액이 조정액 50억 이상의 큰 규모일 경우에만 분쟁신청 없이도 직권조정할 수 있는 현행 법령의 조정 범위를 확대해 위원회가 적극적인 분쟁조정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심사관과 전문가들로 '분쟁현장조사팀'을 구성, 일선행정기관에 여러 번 진정해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 등에 대해 현장지도나 분쟁조정 신청 조치 등의 분쟁해결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소음·진동·악취 등 환경피해 배상결정

소음과 진동, 악취 등 환경피해에 대한 집단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도봉구 창동 상아아파트 정모(38)씨 등 51가구 주민 199명이 인근의 창동성당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 R개발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R개발은 주민들에게 총 2천 28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지난 10월1일 밝혔다.

▷ 정부, 환경건설팅업 중점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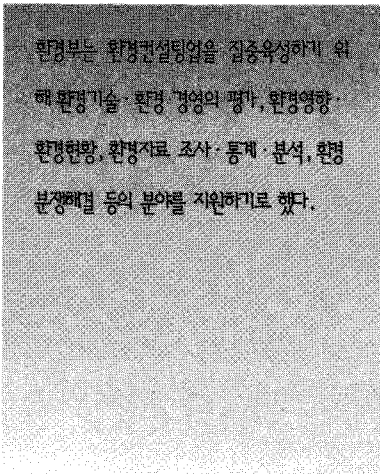
환경기술·평가·조사 등 지원-환경업종 통폐합도

정부는 환경기술, 환경경영평가, 환경분쟁해결 등 환경건설팅업을 중점 육성하는 내용의 범정부적인 '환경산업육성전략안'을 마련했다.

지난 9월28일 재경부·환경부·산자부 등 8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전략안에 따르면 우선 환경건설팅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환경 경영의 평가, 환경영향·환경현황, 환경자료 조사·통계·분석, 환경분쟁해결 등의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조사-설계-시공-운영·관리' 등으로 세분화돼 있는 환경업종을 통폐합해 조과정을 총괄관리하는 풀서비스체계의 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환경산업의 전문성·중대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환경산업의 신설을 추진하고 건설 산업 기본법상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시설공사업도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건설팅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환경 경영의 평가, 환경영향·환경현황, 환경자료 조사·통계·분석, 환경분쟁해결 등의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대기업과 우수 환경기술 보유업체가 공동 도급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수한 환경기술을 가진 업체의 환경기초 시설 입찰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환경영향의 규명-대체-관리기술을 통합하는 패키지형 기술을 개발하는 통합 환경관리프로젝트 등이 포함된 '에코테크노피아 21'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동남아 개도국에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환경산업 수출을 연계하고 거대한 환경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환경산업·기술 상설전시장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환경오염 발생가능업체가 환경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환경홈닥터제', 환경시설 설계시 신기술을 사용해 예산을 절감할 경우 장려금을 주는 '신기술사용 장려금제'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내년 환경기초시설 지속 확충

환경부는 맑은 물 공급과 식수난해결을 위해 내년도 환경부문예산을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확충과 연안지역의 하수처리장설치 등 환경기초시설확충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내년도 환경부문의 투자예산을 올해의 1조3천23억원보다 1천106억원이 증가한 1조4천129억원으로 확정해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확충, 연안지역 하수처리장설치, 수질개선 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정부전체 재정규모 증가율 6.3%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내년에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대구지역의 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대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천241억원 규모의 감소요인이 있어 이를 감안하면 올해보다 20.8% 증가한 셈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내년 중 우선 상수도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사업에 올해 보다 36.4% 증가한 579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낙동강 등 4대강의 녹조방지와 수질개선사업에 올해 84억원에 이어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 각종 환경부담금 징수 실적 "저조"

부과액 30% 못 거둬-5억4,000만원은 결손처리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인 각종 환경부담금의 징수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22일 환경부의 '99년 부담금 징수내역'에 따르면 환경부가 부과한 각



중 부담금은 모두 6,262억 6,500만원으로 이중 69.04%인 4,323억7,500만원이 징수되고 나머지 1,833억5,0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별로는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의 경우 사업자에게 617억3,500만원이 부과됐지만 이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3억6,900만원(41.1%)만이 징수돼, 가장 낮은 징수실적으로 보였다.

배출부과금에는 징수가 불가능한 결손처리액도 5억4,000만원에 달한다.

또 먹는샘물 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질개선부과금도 4,612억9,400만원 중 70%인 3,230억200만원이 건졌다.

이같이 각종 부담금의 징수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환경예산의 축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최근 환경오염규제정책이 직접규제에서 각종 부담금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로 전환하고 있어 간접규제 정책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생태보전협력금제 손질**

환경부는 각종 개발시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사업 감면을 폐지하고 단위부과금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환경부는 연간 협력금 총 징수액을 100억원 정도 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 **58개 환경신기술 평가 신청**

환경부는 엘지엔지니어링의 '침출수종합처리시스템' 등 58개 환경기술이 환경신기술평가 신청을 냈다고 지난 9월21일

밝혔다.

환경신기술평가란 국내에서 처음 개발했거나 외국기술을 개량한 신기술을 정부가 평가, 보증하는 제도로 올해 첫 도입됐으며, 하수처리장 등 공공 환경시설 입찰시 가점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이번에 평가 신청서를 낸 환경기술을 환경관리공단 등을 통해 심사·평가한 후 신기술 지정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새 기술에 대해 현장시험 등을 통해 환경신기술을 지정해 왔으나 시험기간이 길고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서류심사를 통한 평가방법을 도입했다.

▷ **환경부, 폐기물처리 민자유치 건설**

정부는 하수처리장뿐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과 대규모 해안매립시설에도 민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확일적으로 규정돼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국고보조 규모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지난 9월19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만 민자유치를 검토중에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이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시설인 점을 감안,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사업체를 설립하는 제3섹터방식으로 민자유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해안매립시설에 대해서도 민간자본을 유치,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들어 지자체 차원의 폐기

물처리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재정의 한계와 지방비부족 등으로 시설확충이 부진세를 면치 못함에 따라 이 같은 민자유치확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현재 확일적으로 규정돼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국고보조 규모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도시형 종합처리시설이나 소각시설의 경우 50%와 30% 등으로 국고지원 규모가 확일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 같은 지원규모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맞춰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키 위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하고 정책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눠 전문가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폐기물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사안별 전문가그룹 회의를 구성, 민간에 의한 정책대안제시를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 **무공해 대체에너지 뚝어 급증**

무공해 대체에너지 관련출원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무공해 대체에너지 관련출원 건수는 50건으로 96년 25건에 비해 2배 늘어났다고 10월6일 밝혔다. 이 분야 출원 건수는 97년 32건, 98년 40건이었다.

무공해 대체에너지 관련출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불안정한 유가에다 지구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풀이했다.

그러나 특허청 관계자는 "이 같은 기술의 대부분이 기존 기술을 약간 변경한 것



이어서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는 아직 미흡하다"고 밝혔다.

▷ **하수 재이용처리 의무화**

물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 10월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수도법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하수의 재이용계획 및 하수오니의 처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건물 등의 부지로부터 공공 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를 하수의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해 적정 규모의 하수도 설치·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마을 하수도의 규모를 1일 하수처리 능력 50㎡ 이상 500㎡ 미만으로 정했다.

이 시설 설치시 사업계획서의 협의는 그동안 환경부와 해오던 것을 시·도로 이관토록 했다.

개정안은 하수도에 사용하는 하수도용 자재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만 사용토록 하는 한편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관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 **'위성이용 황사 측정' '수질오염 원격 제어' 등 기반한 환경 신기술 쏟아진다**
환경부, 내년 500억 지원

'인공위성을 이용한 황사 정밀 측정 시

스템' '수질이 악화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원격제어 수질 시스템' '메탄 등 매립 가스의 재활용' '자연회귀성 플라스틱과 환경호르몬을 배출하지 않는 식품 포장 용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에코테크노피아 21)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의 첨단 환경 신기술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환경부는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에 내년에만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히 매년 한반도로 유입되는 엄청난 양의 황사 이동 경로와 규모·성분·환경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이용한 고감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 **환경경영 도입 지자체 증가 추세**

서울시·제주시·양평군 등 인증 받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환경경영체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28일 한국능률협회에 따르면 현재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을 받은 업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해 96년 54개소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6월말 현재 401개 업체에 달한다.

최근에는 기업체들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들도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경영체제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이는 공공단체에 대한 일반시민의 환경친화적인 차지경영의 필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96년 한국토지공사가 인증을 받은

이후 98년 신공항건설 공단과 한국전력공사 북제주화력건설처 등 공공기관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해 말 화력 발전소로는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올 1월 양평군청 산업진흥과가 세계 최초로 환경농업부문의 인증을 받았고, 서울시는 중랑하수처리 사업소를 비롯해 환경관리실 7개과와 양천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등도 인증을 받았다. 제주시청 환경관리과도 지난 6월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았다.

남양주시 환경사업소와 양평군청 환경사업소도 올해 안으로 인증을 획득할 예정이다.

이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지방의제21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해서나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환경오염사업장 537곳 적발**
코오롱유화·롯데실감·광양제철 등 포함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거나 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10월11일 환경부는 지난 8월 한달 동안 전국 8,148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단속을 벌여 537곳을 위반업체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성광피혁, 청우섬유, 대한알미늄공업, 일신소제산업, 가나안섬유



등 241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했다.

특히 대한알미늄공업(울산 남구)은 정수시설의 침전조를 정비하면서 발생한 폐수 27톤을 우수로로 유출시켰으며, 일신소재산업(전북 익산)은 금속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황산동용액 5m³를 도금공정으로 이송중 배관파손으로 우수로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코오롱유화(울산 남구)는 대기오염 물질인 악취기준을 42배나 초과해 배출했으며, 삼성석유화학(울산 남구)도 악취기준을 1.6배 넘게 쏘다 각각 개선명령·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롯데삼강(서울 영등포구)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COD(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등 기준치를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 환경호르몬·GMO 안전·유해성평가 강화

신규개발 화학·생물산업제품 표준화·수출장벽 해소 기대

환경호르몬 물질을 발생하거나 유전자변형체(GMO)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안전·유해성 평가가 강화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은 신규로 개발, 생산되고 있는 화학, 생물산업제품들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제품의 안전·유해성과 관련한 표준 평가 방법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고 지난 10월10일 밝혔다.

그동안 유아용 젖병과 젖꼭지, 식품용기 등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거나 유전자변형체(GMO) 등을 이용한 생물산업제품의 안전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됐지만

환경호르몬 물질을 발생하거나 유전자변형체(GMO)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안전·유해성 평가가 강화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은 신규로 개발, 생산되고 있는 화학, 생물산업제품들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제품의 안전·유해성과 관련한 표준 평가 방법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제품의 안전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방법과 기술기준 등이 통일되지 않아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수·출입이 많은 산업제품을 우선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안전유해성 평가기준·규격제정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미국, EU 등 선진국이 산업제품의 안전유해성기술기준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기술장벽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여서 안전유해성 평가의 표준화사업은 우리 상품의 수출지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 [포철] 폐유 전량 재활용 및 저가연료 사용기술 개발

포항제철은 최근 제철소 내에서 발생하는 폐유 전량을 용광로에 투입함으로써 폐유 재활용률 100%를 달성했다고 지난 9월27일 밝혔다.

폐유를 용광로에 투입하면 2천도이상이서 분해돼 완전 무공해로 처리되며 이를 소각로에서 소각할 때 발생하는 황산화물,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이 폐유는 열원으로서도 역할을 해 코크스 사용량을 쇳물 1t당 2-3kg 줄일 수 있어 연간 1억6천만원의 원가절감효과가 있다

또한 포철은 고열량·저가 연료 사용 기술을 개발해서 원가절감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용광로에서 쇳물을 녹이는 연료로 발열량이 높고 구입비가 싼 반무연탄을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연간 80억원의 원가를 절약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포철은 지난 87년부터 코크스 대신 가루 형태의 유연탄(미분탄)을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 사용했으며 최근 반무연탄을 유연탄과 함께 사용하는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반무연탄의 열량은 1kg당 7,700kcal로 유연탄(7,200~7,400kcal/kg)보다 kg당 300~500kg가 높으면서도 가격이 톤당 4~5달러 싸서 경제적이고 일산화탄소 발생량이 줄어들어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포철은 설명했다. ◀